

스페인 SPAIN



스페인 법원,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기간 확대 판결 -노동자 지원으로서의 육아휴직을 아동의 돌봄 권리로의 관점 전환

곽 서 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 지난 1월, 스페인 남동부에 위치한 무르시아 지역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of Murcia)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두부모 가정의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배우자가 있는 두부모 가정과 같은 육아휴직기간을 한부모 가정에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스페인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한 여성은 2022년 1월, 무르시아 지역에서 딸을 출산했다. 해당 여성은 한부모였는데, 자신의 딸이 두부모가 자녀 출산시 주어지는 동일한 수준의 부모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 INSS)은 그녀의 요청을 거부했고, 해당 여성은 법적 대응을 했으나 1심 사회법원(Social Court)에서 기각됐다.¹⁾ 이후 그녀가 무르시아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 지난 1월 무르시아 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부모여도 두부모와 동일하게 총 32주의 육아휴직과 관련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그녀가 부모로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본 육아휴직 16주에 추가로 배우자가 있었다면 받았을 16주간의 육아휴직을 포함한 것이다. 무르시아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녀 출산 후 신생아 돌봄의 필요성 자체는 어느 형태의 가정이든 동일하며, 그 기간이나 강도 역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이 부모의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 돌봄을 받는 기간이 더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참고자료

- CNN Espana (2025.1.28.), "La Justicia española reconoce el derecho de una madre soltera a recibir también la pensión paternal", <https://cnnespanol.cnn.com/2025/01/28/espana/justicia-espanola-reconoce-derecho-madre-soltera-pension-paternal-orix> (접속일: 2025.3.18.)
- RTVE (2024.11.6.), "El Constitucional reconoce los permisos ampliados de 26 semanas a todas las familias monoparentales", <https://www.rtve.es/noticias/20241106/constitucional-reconoce-permisos-ampliados-26-semanas-familias-monoparentales/16319005.shtml> (접속일: 2025.3.18.)
- The Guardian (2025.1.20.), "Single mother entitled to same parental leave as couple, Spanish court rule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an/20/single-mother-entitled-to-same-parental-leave-as-couple-spanish-court-rules> (접속일: 2025.3.18.)

이번 무르시아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원고였던 여성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도 동일한 기간의 육아휴직을 통해 동일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인정받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 영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가 출산한 지 3년이 지난 만큼,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이행하도록 조치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과거 거부당한 육아휴직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는 피고측에서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사회보장국(INSS)은 해당 판결에 대한 상고까지는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나, 판결 내용에 대한 해석 요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무르시아 고등법원에 해당 원고 여성이 근로자로서 16주의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노동법 규정상 10주만 인정될 수도 있는지 명확하게 추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무르시아 고등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법적 배경으로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할 수 있다. 작년 11월,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이 두부모 가정의 아동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위헌심사는 『근로자법(Workers' Statute)』 제48조 및 『사회보장법 일반법(General Social Security Law)』 제177조의 휴가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휴가를 16주 이상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은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휴가 16주에 다른 부모를 위한 휴가 10주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²⁾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파블로 부스틴두이(Pablo Bustinduy) 사회적 권리, 소비자 문제, 2030의제 담당 장관(Minister of Social Rights, Consumption and Agenda 2030)은 한부모 가정의 권리 확대를 위한 진전이라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본 원고에서 소개한 무르시아 고등법원의 판결은 스페인 내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이번 무르시아 고등법원에 회부된 실질적인 사건에 적용된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기존 16주에 추가로 10주를 더해 총 26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무르시아 고등법원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두부모 가정과 동일한 육아휴직 혜택과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에 기반하여 총 32주(기존 16주 + 배우자에게 주어질 16주)를 인정했다.

한국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지속적으로 한부모와 두부모 가정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 왔는데, 이번 스페인 사례에서는 한부모 육아휴직을 단순히 근로자를 위한 지원으로 접근하는데 그치지 않고 태어난 아동이 동등한 돌봄의 권리를 갖는다고 해석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참고할 만 할 것이다.

1) 스페인 사회보장국(INSS)은 사회보장청 산하 기관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연금, 출산 및 육아휴직, 장애 보조금 등)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1심 법원은 크게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사회법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법원은 노동, 해고, 산업재해,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관할하는 1심 법원이다.

2) 이는 남녀 근로자 모두 자녀 출산 직후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 6주는 중복된다고 보고 제외한 것이다.



호주 정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9차 국가보고서제출 -호주의 성평등 정책과 구조적 과제

조혜인 모네시대학교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참고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2025.1.13.),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Australia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ttps://www.pmc.gov.au/resources/ninth-periodic-report-to-cedaw> (접속일: 2025.3.22)

- 📌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여성부 장관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호주의 제9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의무에 해당한다.
- 📌 이번 보고서는 지난 4년간 젠더 기반 폭력, 고용, 사법 접근성, 원주민 권리,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주가 취한 조치들을 상세히 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제9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호주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와 그 진전 사례를 조명하며,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사상 최저치인 11.5%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은퇴 후 소득 격차 축소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연방 예산 수립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 및 성별 영향 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s) 재도입 ▲정부 기관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PPL) 확대 및 성평등성 강화 ▲『직장 내 성평등법(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2012)』개정: 직장 내 성평등 기구(WGEA)가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성별 임금 격차를 국가, 산업, 직종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임금 비밀 유지 조항 금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준수,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내 임금 형평성 전문가 패널 설치 ▲유급 가정폭력 휴가 권리 보장 ▲여성 중심 산업(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분야 - 예: 요양, 유아 교육 및 보육, 재향군인 돌봄, 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투자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영유아 보육 비용 지원, 성 정체성 및 젠더폭력 피해 경험에 따른 차별 금지 강화
- 📌 이 외에도 호주 국제 개발 정책의 방향으로 전체 해외 개발 투자 중 80% 이상에 성평등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300만 호주 달러(약27억 5천만원)이상의 개발 지원금에는 성평등 목표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호주가 성평등 실현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는 성별 임금 격차의 지속, 연금 격차에 따른 생애주기적 경제 불평등, 여성 중심 산업의 구조적 저평가와 취약한 복지 체계, 가정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만연, 원주민·성소수자·가정폭력 생존자에 대한 교차적 차별, 그리고 젠더 관점의 제도화 및 모니터링 체계의 미비 등이 포함된다.
- 📌 이처럼 제9차 CEDAW 국가보고서는 호주의 성평등 정책과 실천이 제도적으로 일정한 진전을 이뤄왔음을 보여주지만, 구조적 불평등과 교차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 📌 특히 정책 및 제도화의 일관성, 장기적 모니터링,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은 성평등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핵심 요소이다.



영국 정부, 군내 성범죄 대응을 위한 독립 기관 설치법안 제출

이 지 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영국 군대 내 성범죄 대응 절차는 내부 신고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상명하복 구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절차의 신뢰성 및 사건의 효과적 처리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에 영국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군인의 복지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독립적인 군 위원회를 설립하고 복무 및 복지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Armed Forces Commissioner Bill 2024-2025』을 발표했다.

제이슬리 벡 사건 : 10대 여성 군인 제이슬리 벡(Jasley Beck)의 자살 사건은 군 내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부각했다. 지난 2월 검시관(coroner)³⁾ 니콜라스 라인버그(Nicholas Rheinberg)는 영국 정부가 한 젊은 군인을 상관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으며, 가해자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관심이 그녀의 생명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2021년 12월, 제이슬리 벡은 다수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폭행, 희롱, 스토킹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전 그녀는 내부 신고를 통해 군의 조사를 받았으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가해자인 남성 장교와 중령에게 가장 가벼운 처벌인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유족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재조사를 요청했고, 검시관은 군 내 처리 절차의 체계적 실패(systemic failures)를 지적하며 성폭행 신고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이 사망에 일조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군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보고하는 대신 내부의 사소한 행정 조치로 처리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후 국방부는 여성 군인의 복지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성명(inquest)을 발표했지만, 독립 기관 설립을 통한 외부 감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제이슬리 벡 사건 이후, 국방부는 군 내 여성들이 여전히 범죄적인 성적 행위의 표적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2022년 국방부는 국방 중대 범죄 부서(Defence Serious Crime Unit, DSCU)를 사령부 내에 설립하여 성범죄 대응 훈련을 받은 군 간부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내부 인력에게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피해자 및 증인 보호 부서(Victim and Witness Care Unit, VWCU)를 설립하여 외부 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군 내부 조직이라는 한계로 인해 독립적인 조사와 공정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1월, 영국 정부는 독립적인 군 위원회 설립을 통해 군 내 복무 관련 복지 문제를 외부 위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Armed Forces Commissioner Bill』을 하원에 제출했다. 특히, 군 내 성범죄 조사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조사 기관의 독립화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와 증인 보호가 강화되고, 심각한 불만 사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이슬리 벡 사건과 검시관의 결론이 언급되며, 군 내 성범죄 대응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3회 독을 거쳐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왕실의 동의를 거쳐 최종 입법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2025.1.13.),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Australia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ttps://www.pmc.gov.au/resources/ninth-periodic-report-to-cedaw> (접속일: 2025.3.22)
- UK GOV (2025.3.18.), "Fundamental changes to Armed Forces processes to better support Women in UK Defence", <https://www.gov.uk/government/news/fundamental-changes-to-armed-forces-processes-to-better-support-women-in-uk-defence> (접속일: 2025.3.19.)
- UK Parliament (2025.3.17.), "Armed Forces Commissioner Bill", <https://bills.parliament.uk/bills/3881> (접속일: 2025.3.19.)
- UK Parliament (2025.3.6.), "Written evidence submitted by the Centre for Military Justice", <https://committees.parliament.uk/writtenevidence/138731/pdf/> (접속일: 2025.3.20.)
- The Guardian (2025.2.20.), "UK government may have breached young soldier's right to life, coroner concludes",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5/feb/20/teenage-soldier-jaysley-beck-sexually-assaulted-coroner-concludes> (접속일: 2025.3.20.)
- UKDJ (2025.3.12.), "Government enhancing welfare of women in the forces", <https://ukdefencejournal.org.uk/government-enhancing-welfare-of-women-in-the-forces/> (접속일: 2025.3.19.)

영국 정부는 해당 법안 도입을 통해 외부 익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부 조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인 군대의 성차별과 계급 차이에 의한 위력 성범죄 문제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남아있다. 첫째, 독립 조사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군의 기존 지휘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 군 내부의 위계질서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둘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이 단순히 법률적 개선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 내 조직문화의 변화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독립 기관이 조사 및 처벌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군 내부의 인식 변화와 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은 단순한 법안 통과는 넘어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3) 검시관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임명한 독립적인 사법 기관 직원으로 자살, 재해사, 중독사, 행려병사, 사고사 또는 원인 미상의 사망 사건에 대해 사법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망 사건을 특정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